

#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2023. 5. 3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5월 31일(수) 14:00~17:5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90호 및 보고 제19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90호 『(주)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제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친 ☹☹☹☹(주)이 제가 너무나 믿고 아꼈던 한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해 존립 위기를 맞고 있음. 회사에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저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고 유휴 차량을 매

각하였으며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매각하고 상장주식을 모두 매각했음. 그리고 저의 사재를 털어 25억 원을 ♣♣♣♣(주)에 출연하였음. 당시 횡령금액이 발생했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을 뿐 정확한 금액을 몰랐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동성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고 사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도 사고 발생 한참 이후에야 알게 되었음. 그리고 저는 계속 횡령사고로 일어난 ♣♣♣♣(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였음. 횡령금액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장기간 일어났음.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함. 하지만 대표이사가 충격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음.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지켜나가야 했음. 저는 지금 제가 횡령사고를 알고도 횡령사고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매매했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음. 미공개중요정보로 인한 피해는 소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할 때 생김. 그런데 저는 당시 정확한 횡령 금액을 알지 못했고 횡령 사고가 언제 공시되는지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음. 당시 상황은 정말 긴급했음.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 ♣♣♣♣(주)에서 약 20년 동안 재직했던 직원이라는 점이 너무나 큰 충격인 상황에서 저는 횡령금액에 대한 공시 여부를 알 수 있는 정신도 아니었고 횡령금액이 공시되었을 때 주가하락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음. 오직 제 걱정은 회사가 유동성에 막혀 부도가 날까봐, 이 위기를 막고자 하는 생각뿐이었지, 횡령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에 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임. 이런 제가 ♣♣♣♣(주)의 주가 하락을 걱정하여 미리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제 자존심과 양심이 허락하지 않음. 억울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으나 적어도 제 자신보다 ♣♣♣♣(주)을 훨씬 더 사랑한 사람, 제 평생을 바치고 일군 ♣♣♣♣(주)의 발전을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발언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함.

○ (위원) 혹시 대표이사께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 주식 매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셨을 것인지?

▶ (진술인) 그 당시에는 횡령이 생겨서 일단 유동성에 문제가 오니까 앞뒤 생각할 여력 없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가증권을 팔았음. 파는 과정에 주식도 포함되어 있음.

○ (위원)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신지?

▶ (진술인) 그 당시에는 회사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이 더 중요했지, 다른 것은 생각도 못했음.

○ (위원) 그때 당장 메꾸어야 하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 (진술인) 자금이 부족해서 바로 메꾸어야 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설 지나고 나서 금융권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료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신용으로 원료구매를 했었는데 이것도 중단될 위험이 있었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월 60~70억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원료 구매가 거의 그 금액 이상이 되고 금융권으로부터 한도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유동성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금이 부족할 것을 예상했음. 그래서 설 지나고 16일부터 저축정보험부터 해지해서 한 15억 원 정도를 조달했고 그다음에 이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서 11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음. 그렇게 고비를 넘기다가 2월 하순 지나면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더 일어나서 대표이사님께서 25억 원의 유동성을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음.

○ (위원) 그런데 지금 위기를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공개 정보의 공개는 3월3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그전에 금융기관은 알고 자금공여를 회피했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금융권에서 저희가 무역금융이라는 한도를 270억 원 정도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대출중단이라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월말 지나서 바로 워크아웃신청을 하게 되었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채권은행한테 요청해서 3월초에 워크아웃신청을 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이 사건 혐의사실은 당시 (주)♣♣ 대표이사였던 ■■■가 □□□으로부터 2021년 2월12일 종속회사인 ♣♣♣♣(주) 횡령 사고 발생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2021년 2월15일 ○○○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 주식 76,260주를 매도하고 2021년 2월18일 회사 직원을 통해 (주)♣♣ 자사주 1,969,460주를 매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임. 변론의 주 취지는 (주)♣♣ 자사주 1,969,460주 매각 관련하여서는 이미 2021년 2월26일 ○○○○ ○○○○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 매각 절차만을 밟았다는 것이며, 또한 ■■■가 처음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것은 2021년 2월20일 (주)♣♣과 ♣♣♣♣(주) 그리고 외부감사인 회계사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당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임.

○ (위원) 여기 ♣♣♣♣(주) 대표이사가 ■■■ 대표이사님의 동생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씨는 (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 (진술인) 맞음. 가지고 있음.

○ (위원) □□□씨의 (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 ▶ (진술인)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한 5% 정도임.
- (위원) 자회사인 ♣♣♣♣(주)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그날 바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다음날 그 이후에 가족모임이 있을 때 보고했다는 내용이 약간 와 닿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자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모 회사의 대주주한테 자회사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더구나 친형제 관계이고 그날 바로 본인이 이 내용을 파악한 2월10일경이나 11일경에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지?
- ▶ (진술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때 횡령금액도 ♣♣♣♣(주)에서 인지하기로는 소규모로 알고 있었음. 한 20~30억 원으로,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저희들이 2월20일인가, ■■■■■과 (주)♣♣, ♣♣♣♣(주) 정리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자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하게 되었음.
- (위원)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 110만주인데 이 모회사의 주식 처분 의사결정에 ■■■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처분하라고 지시하신 것 아닌지? 상식적으로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모회사 지분 100만주 이상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것이 와 닿지 않는데 어떠한지, 지시하신 것 아닌지?
- ▶ (진술인) 동생한테 경영을 100%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경영권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음.
- (위원) 자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물론 형제관계이기도 하지만 지분관계로 보면 당연히 그것을 보고하고 처분에 관한 것도 상의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지시한 것이 없었는지?

▶ (진술인) 그 당시 제가 사후보고를 받았는데 ㄷㄷㄷㄷ(주) 자체에 유동성 위기가 와서 판단을 내릴 여력이 없었다는 것임.

○ (위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씨의 처분행위나 ■■■씨 자녀분들의 처분 행위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가 모회사의 대주주인 형의 관여 없이 자기가 임의로 이 주식을 다 처분했다는 것이 일단 와 닿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형태(pattern)가 저희가 다른 차명주식으로 봤던 형태(pattern)들과 비슷한데, 혹시 조사과정에서 ■■■씨의 의사결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 (보고자) 아까 ■■■씨도 워딩(wording)을 하셨는데 자녀분들이 일단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본인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이라는 것을 워딩(wording)하셨고 아까 ■■■씨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원래 이 주식은 ■■■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었음. ■■■씨 6촌 형인 ㄴㄴ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차명으로 있는 ○○○씨의 형님임. 6촌 형님 ㄴㄴㄴ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처음에는 자기가 증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포렌직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당시 경리부장이 증여를 많이 받으면 금액범위에 따라서 증여세를 많이 내야한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씨는 그것을 쪼개서 자식 3명에게 분산해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증여를 했던 것임. 이 주식은 애초에 ■■■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저희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경위는 밝히지 못했지만 실제 이 주식은 ■■■씨가 ㄴㄴㄴ씨 명의로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식한테 증여형식으로 넘긴 것이고 자식들도 자기가 이 주식을 어떻게 몇 주를 증여 받았는지와 누구한테 증여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식 자체 처분도 본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이라고 워딩(wording)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씨의 차명주식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음.

- (위원) 수사기관에서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안에 이견 없음.
- (위원)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씨와 ㄴㄴㄴ(주) 같은 경우에는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

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신 것이 맞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실제로 정말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이다, 만약 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봐서 우리가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람.

- (보고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변호인 의견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를 많이 했음. 일단, 저희가 검토한 판례에 의하면 부도를 막기 위해서 한 15~2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자회사에서 횡령사고나 각종 사고가 났어도 그 정보 자체가 정보공개되기 전에는 미공개정보로 본 판례가 있음. 두 번째로 이분들은 그 방법 외에는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유가증권을 먼저 팔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자산이나 회원권이나 이러한 것들을 매각한 흔적이 있고, 25억 원을 나중에 사재로 출연했다고 하는데 미리 사재를 출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며 그 외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회사 측은 법률자문 결과에 나온 논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건 제19호 『OOOOO(주) 등 8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 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91호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 등 7개사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첫째로 한 4~5년 전에 공매도와 관련되어서 지연보고가 있었다는 부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음.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공매도 관련된 지연보고가 있었던 펀드는 당시 2018년에 설정된 Long·Short펀드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 Long·Short전략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공매도가, 저희가 특정 주식을 빠뜨리게 하려거나 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매수 종목에 대한 헷지(hedge), 중·장기적인 헷지(hedge)를 주목적으로 해서 공매도를 함. 당시에 운용했던 펀드의 규모는 운용자산 규모가 57억 원으로 매우 작은 소형의 펀드여서 실제로

저희가 공매도했던 종목들, 총발행주식의 0.01%~0.04% 범위 안에 있었음. 저희가 회사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부터 준법감시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힘을 많이 기울였던 부분임. 그리고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고 한 4~5년 전에 이런 지연보고가 있기는 했었으나 다른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준수를 했었고 특히 차입 여부, 또한 업틱룰(Up-tick rule)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준수를 했음. 이제 지연보고가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함.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2018년 7월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 준법감시체제에서는 이런 공매도 보고업무가 있다는 것을 운용업무지원 쪽에 전달했었으나 운용지원업무를 했던 부장이 그 당시에 놓쳤음.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공매에 대한 업무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누락을 했음. 그러나 월말에 회사 내부에서 준법감시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1주일 동안 저희가 면밀히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하는 기간이 있고 그때 저희가 이 사실을 발견해서 자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즉시 바로 보고를 했음. 그다음에 2019년 5월 2일에 준법감시인을 하셨던 상무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도 그 당시에 많이 당황스러웠음. 원래 준법감시와 운용지원업무를 같이 공매도 업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지연이 있었고, 이것 또한 저희가 자발적으로 발견을 해서 바로 잡고 금감원에 지연보고를 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공매도로 인해서 실제

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거나 그런 부분은 일체 없었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용하는 펀드의 규모가 57억 원이었고, 매우 소규모의 펀드이기는 하지만 펀드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공매도를 했던 기간의 펀드 자체는 수익이 플러스(+)였으나 공매도를 했었던 종목에서는 실제로 1억 8,600만 원이라는 손실을 봤음. 그래서 저희가 공매도 지연보고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저희가 공매도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당시에 바로 자발적으로 보고를 했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마지막에 지연보고가 있었던 것이 2019년 6월17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난 4년 동안 공매도 지연보고는 없었고 또한 다른 공매도에 대한 규정도 저희가 모두 다 준수하고 있음. 앞으로 미래이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또 선진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많이 기여를 하려고 함. 준법감시법규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함.

○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이전에 발생했던 것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인지? 2018년, 2019년 이후에는 인력이 충원된 것 외의 다른 변화는 없는지?

▶ (진술인) 인력이 충원된 후에는 공매도에 대한 법규위반이 없었고 2018년, 2019년에 있었을 때 가장 크게 기인되는 이유는 인력이 1인 체제로 해서, 물론 저희가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저희 내부적으로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자발적으로 발견했었지만 매일 매일하는 업무 중에서는 1일씩 놓친 부분이 있

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원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18년에서 2020년 무렵에 저는 직장을 다니며 채테크를 하고자 부업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였음. 그 당시에 저는 현물주식투자에서 본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식이나 경험 없이 공매도 투자를 하게 되었음. 처음 공매도 거래 후 한 달 정도는 매일 확인하고 기한 내 바로 보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중소기업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 업무로 바빠서 거래를 자주하지 않게 되었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1~2번 정도 주식 현황이나 거래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순보유잔고보고도 2~5일 정도 모아서 하게 되었음.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보고의 일부분이 지연보고에 해당되게 되었음. 이러한 지연보고에 대하여 그 당시 증권사나 기관에서 주의통보나 경고 등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그리고 신고한 자료에 보면 지연보고 내용만 적으면 '정상'으로 뜨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잘못된 보고형태를 지속하게 되었음. 과거에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고의가 아닌 저의 무지로 인한 과오로 중대한 과실임을 그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5년이나 지난 올해 초에 금감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음. 지금은 저의 과실에 대해 뼈에 사무치게 뉘우치고 있음. 2020년 1~2월경에 대주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증권사의 상

환 요청으로 대주잔고는 많은 손실을 보고 모두 청산하였음.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 보게 되었음. 이후 저는 2020년말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하고, 2021년에는 실직 상태였으며 2022년 이후 주1일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무주택으로 집사람 명의의 전세 2억 원에 월50만 원의 반전세로 살고 있음. 4~5년 전의 저의 무지함과 보고기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해 저질러진 과오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나고 저 또한 파산에 이르게 될 상황임. 부디, 저의 무지함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 꾸짖어주시되, 한 가정과 한 사람을 살려 주신다는 아량을 베푸시어 제가 취업해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림.

○ (위원) 본인의 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신지?

▶ (진술인) 제출해 드린 첨부에 보면 납부증명세라든가, 연간소득증명원을 첨부2와 첨부3에 붙였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동 건은 자조심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고 조금 전에 금감원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를 자조심에서는 ‘중과실’보다는 ‘과실’로 하여 경미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다음에 포괄일죄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그래서 아마 일정부분은 포괄일죄로 간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도 초기 부분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제도기간을 두어서 일부 감경을 해 주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음. 자조심의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금감원의 수정안을 보셨던 것이고,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일정 기간 안에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 (보고자) 공매도가 일정 수량 이상인 경우 저희 감독당국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나중에 매도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들을 투자시에 유의하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러면 규모도 그렇지만 적시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한지?

- (보고자) 맞음. 과거에는 T+3일 아침 9시까지 보고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 3월22일 규정 개정으로 T+2일 장종료 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시기를 좀 더 단축시킨 일도 있었음.

○ (위원)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부분은 순보유잔고비율로 ‘중대’, ‘보통’, ‘경미’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적시성을 제재의 어떤 것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것 같음. 왜냐하면 그것은 이 부과기준 안에서 일단 결과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과는 순보유잔고비율로 경중을 나누어 놓으셨는데 적시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지연보고한 것과 많이 늦게 지연보고한 것 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둘 것인가, 만약 그것을 결과로 고려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많이 지연된 것에 따른 주의의무위반 동기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지?

- (보고자) 저희가 애초에 만들었던 초안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반의 기간을 감안해서 과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반동기 산정 시 ‘상’, ‘중’, ‘하’로 구분을 했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조심에서는 지연보고 자체는 미보고, 거짓보고보다는 고의성과 악의성이 경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업무착오에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지연보고의 경우에는 ‘경과실’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의 정황이 발견되면 그 건에 대해서만 위반동기 ‘상’ 또는 위반동기 ‘중’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수정심의가 되었음.

○ (위원) 저도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 삼성헤지자산운용(주)의 경우 보니까 지연보고가 발생한 원인이 담당자의 휴가로 인한 대직으로 지연보고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고 위반상태가 어쨌든 장기간 지속되었음. 이런 경

우에는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지?

- (보고자) 그래서 자조심에서 소수의견으로 삼성헤지자산운용(주)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음.

○ (위원장) 저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 1억 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법의 취지를 살리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규정을 원칙적으로 해석한다면 금감원 실무(안)처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위반기간이라는 것이 1일에서 10일 정도이고 또 개인이 공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교란을 가져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계속 듭니다.

- (보고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여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의결을 하고자 함.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단순 투자자인 초범의 개인에 있어서는 일단 50%를 추가 감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 (보고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제91호 안건 중 삼성헤지자산운용(주)의 경우 7월11일 및 10월10일자 보고의무 건은 두 달 이상 미보고된 상태에서 12월11일에 일괄보고된 바, 위건 보고시인 8월6일에는 위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3,00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초범인 개인의 경우에는 내부준법감시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단순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추가로 5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의결안건 제92호 『(주)LG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93호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94호 『SK이노베이션(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제가 담당한 것이 Pictet Asset Management SA와 Banque Pictet & Cie SA 건인데, 먼저 Pictet Asset Management SA 건부터 말씀드리겠음. 회사는 (주)LG 보통주 442주에 대한 공매도 위반으로 통지를 받게 되었음.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Pictet이 소유한 (주)LG 주식을 전량 일반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주)LG 주식의 주식병합 효력이 공교롭게 겹치게 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음. 그래서 (주)LG주식이 분할과정에서 주식병합을 거치면서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Pictet의 기업행위 관련된 시스템이 이를 회계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또 회계시스템을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시스템을 반영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주)LG주식 전량을 매도함에 따라서 그런 공매도 위반이 발생하게 되었음. 사고 이후에 Pictet은 이러한 기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주식 수가 변동되는 주식 주문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이벤트 체크리스트 절차를 도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향후에는 중대한 기업행위로 영향을 받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이번 거래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위반 규모도 442주로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Banque Pictet & Cie SA건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해당 은행은 (주)LG 보통주 1,828주에 대한 공매도 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되었음. 본 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주)LG 주식의 분할 및 병합으로 인해서 거래가 중

단된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거래가 중단된 기간인 5월7일에 고객관계관리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보유한 (주)LG 주식 전체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게 된 경우임. 다만, 거래 중단 기간 동안 제출하였던 주문이 계속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5월27일에 주식 수 감소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서 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사고발생 후에는 기업행위 관리하는 팀에서 이런 기업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담당 고객관리자에게 연락하고 해당 기업행위에 영향을 받는 주문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는 등 기업행위를 처리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였음. 본 건도 은행이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가 공매도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위반하여 체결된 주식 수는 398주 정도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은행에서는 조치 통지서상 위반 규모가 398주가 아니라 1,828주라는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문이 있었는데, 자조심 과정에서 실제 체결되지 않은 주문들도 모두 제재의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자조심 마친 후에 금감원에서도 대상이 되는 1,828주 주문내역을 알려주셔서 은행에서도 해당 자료들을 살펴보고 제재 근거와 수량에 대해서 수궁하게 되었음. 그래서 이러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은행을 대리해서 자조심과 감독당국 담당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은행은 앞으로도 한국의 증권거래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도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음. 이상 두 건에 대한 진술을 마칩.

○ (위원) Banque Pictet & Cie SA와 Pictet Asset Management

SA 두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

▶ (진술인) Pictet 그룹의 계열회사 관계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의뢰 받을 때 같이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의뢰를 받아서, 양자 간에 서로 관련은 없는 것 같음. 계열회사 관계 정도로만 알고 있음.

○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동일하지는 않은지?

▶ (진술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반한 방식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른 것 같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Pie Fund를 대표해서 CEO인 ▲▲ ▲▲ ▲▲▲▲▲, 그리고 통역 자격으로 ★★ ★★★★★가 참석했음. 법률 대리인으로서 □□□ □□□□□ ▼▼▼ ▼▼▼ 참석하였음.

▶ (진술인) Pie는 2021년 6월7일 및 6월8일 □□□□□□을 통해 (주)레이 주식의 매도주문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6월7일 7,829주 및 6월8일 30,671주, 합계 38,500주에 대한 주문이 공매도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Pie는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양형 시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먼저, Pie에게는

공매도를 할 의향이 전혀 없었음. Pie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시작한 2019년 8월 이후 종류를 불문하고 공매도 거래를 한 바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그럴 의향이 없음. 그럼에도 본 사안과 같은 공매도가 발생한 것은 Pie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레이에서 1대1 무상증자를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신주배정기준일은 2021년 6월4일,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같은 달 23일이었기 때문에 Pie에서 무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21년 6월23일부터 매도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신주상장예정일이 아니라 신주배정기준일에 맞추어 (주)레이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임. 위와 같이 본 건 공매도는 무상증자 받은 주식의 매각일자를 착각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공매도를 의도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음. 참고로 본 사안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과 신주의 상장예정일 사이의 간격이 19일이었으나, 뉴질랜드를 포함한 다른 비아시아 국가들에서 두 날짜의 평균 간격은 이틀이기 때문에 그동안 Pie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한 적이 없었음. 이처럼 Pie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를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 의향이 없는 것이며, 본 공매도 사안은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순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의도하지 않은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Pie가 취한 시정조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람. Pie는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장내주식 매입 및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내규 및 시스템의 개선, 컴플라이언스의 강화,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Pie가 2007년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 이상 본사 소재지인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 금융당국으로부터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이는 Pie가 준법의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금융당국과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에 따르면 Pie에 대한 예상과징금의 규모가 뉴질랜드에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비해 최고 약 60배 정도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Pie에게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제재의 내용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공개되어야 하는데 뉴질랜드에 비해 60배 정도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동안 쌓았던 Pie의 평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함. 비록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과징금의 산정방식 등이 상이하나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ie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건전한 투자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감독당국에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향후 본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이 없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위와 같은 저희의 의견을 고려하시어 Pie Fund Management Limited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 자리에는 Pie의 최고경영자인 ◀▶▶ ▶▶▶ ▶▶▶▶▶▶▶가 직접 참석하였음. 최고경영자께서는 Pie의 약속을 전달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릴 예정임. 잠시 시간을 내어 그 발언을 듣고

발언내용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인내와 이해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 ▶ (진술인) Pie Fund Management Limited의 이사 겸 CEO로서 2021년 6월 공매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뉴질랜드에서 직접 와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사건은 당사의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함.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고 당사는 파악하자마자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바로 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본 공매도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무상증자에 대해 당사가 주식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발생하였음. 무상증자의 경우 기준일과 결제일 사이에 현저한 나라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 건의 경우 당사의 주거래 지역 통상 2일보다 10배 더 길었음. 당사는 본 공매도 건을 통해 당사의 내부절차를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오류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시스템 및 교육을 강화할 수 있었음. 금일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시스템 통제로 결제일 문제로 인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당사는 뉴질랜드 투자자들에게 퇴직연금투자 및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저희에게 평판은 매우 중요하며 2007년 창립 이래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 당사는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나 보다 광범위한 투자운용업계에서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본 건 통지를 받은 이후 평판 영향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규제당국인 Financial Markets Authority와 본 건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 과징금

의 구체적인 내용은 뉴질랜드에 공시가 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사의 재무제표에도 반영될 예정임. 본 과징금은 당사 연간액 약 13%에 달함. 당사는 당사와 투자하는 모든 국가와 좋고 생산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뉴질랜드인들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성장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시장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함. 본 건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의 다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본 건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공매도가 의도적으로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되었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심각할 것이지만 본 공매도 건은 당사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건임. 또한, 저희는 한국의 법률규제, 자본시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저희가 귀 증선위 앞에서 본 사안이 뉴질랜드 현지사안이라면 본 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제재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함. 과징금 관련하여 뉴질랜드 규제당국과 논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본 건에 예정된 과징금은 뉴질랜드 감독당국이 유사하다고 생각한 운용사 라이선스 의무불이행에 대한 위반보다 60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본 사안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당사는 예정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당사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과 언론의 관심 또한 우려하고 있음. 본 과징금은 당사가 뉴질랜드 감독당국에서 유사한 위반에 대해서 부과 받을 수 있는 제재금의 약 18배~90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매도가 일반적이지 않음. 또한, 규칙을 준수

할 의무는 투자자가 아닌 브로커에게 있음. 공매도 관련 규정은 뉴질랜드거래소인 NZX에 의해 모니터링 되며, 본 건과 같은 상황은 의도치 않고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소한(minor) 미준수로 간주되어 뉴질랜드거래소 규칙을 통한 위반으로 처리될 것임. 또한, 최대 벌금은 뉴질랜드 10,000달러, 약 800만 원일 것입니다. 현재 제안된 과징금은 뉴질랜드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의 44배가 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한국 감독당국의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당사가 시정하기 위해 기울인 협력 대응 및 노력과 더불어 본 과징금의 비례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함. 오늘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건으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뉴질랜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진술인) 올해 3월31일 기준, 20억 뉴질랜드 달러로 한화로 치면 한 1.6조 원 조금 더 되는 금액임.

○ (위원장) 지난 번 자조심에 이어 이번 증선위 회의에도 CEO인 ▶▶▶ ▶▶▶ ▶▶▶▶▶▶▶께서 직접 한국에 와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건의 과징금 부과와 무관하게 Pie Fund Management Limited가 한국 주식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계속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치예정내용을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은 당사에 대해서 SKIE테크놀로지(주) 주식 5,570주 공매도를 원인사실로 과징금 3억 5,090만 원을 부과하는 사전통지를 하였음. 조치 원인사실인 공매도 발생사유 및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음. 당사는 2개의 펀드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다른 계좌에 SKIE테크놀로지(주) 주식 5,570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미보유 계좌에서 주문하여 공매도가 발생하였음. 주문 해당 계좌만 보면 공매도이나 당사 보유 전체 계좌를 보면 매도 당시 타계좌에 동일 주식,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시장에 영향을 준 공매도는 아니라고 생각함. 공매도 확인 후에 매매결과 확인 과정에서 공매도 사실을 확인하고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동일 수량의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시정하였음. 또한, 당초 주식을 보유했던 다른 계좌의 해당 주식은 계획대로 매도를 하여 주문 실수로 발생한 오류를 정상화하였음. 착오 거래 및 정리 과정은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음. 이 공매도 거래는 육안으로 잔고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단순과실로 발생한 것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증권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후 거래할 수 있도록 코스콤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는 잔고 없는 공매도 거래

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위 사실 발생 후 1년이 지난 2022년 7월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추가자료 제출이나 질의 등이 없어서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금년 4월18일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서류를 받았음. 당사의 행위는 고의적인 공매도는 아님. 저희가 부탁을 드릴 말씀은 저희 (주)퀀트인자산운용 자체가 업력도 짧고 규모도 작은 자산운용사임. 금융감독당국에서 시장질서 확립과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엄단하는 것은 공감함. 다만, 당사의 행위는 감독당국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공매도 거래와는 다르다고 생각함. 매매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 무차입 공매도도 아니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도 아님. 이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 하지도 않았음. 불법의 의도나 목적의 거래가 아닌 단순 계좌 선택 착오로 인한 업무과실로 발생하였고 자본시장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로 회사나 펀드에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 공매도 확인 후 손실이 발생함에도 즉시 시정하였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타계좌의 주식은 예정대로 매도하였으며 이후 거래시스템을 개선하여 공매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거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함. 건전한 자산운용업을 하는 신생 소규모 자산운용사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 받음으로써 회사 존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 바라며, 또한 이번 실수를 계기로 더욱더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함. 부당이득의 목적도 없고 타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당사의 거래에 대해서는 발생사유 및 처리 과정을 감안하여서 최소한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사건경위와 저희 회사의 입장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논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자조심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면 Pictet Asset Management SA에 대해 자조심에서는 원안은 ‘중과실’이었는데 사정을 고려할 때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논의하신 것 같은데 금감원도 그러한 자조심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입장인지?
- (보고자) 이런 사례(case)들이 최초 적용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오류 같은 경우에는 ‘중과실’로 보자는 기준을 자조심에서 논의를 했었음. 다만, 일괄적으로 시스템오류라고 해서 다 ‘중과실’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서 그 부분도 ‘과실’로 볼 것은 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위원) 그다음에 Pie Fund Management Limited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외에 추가로 감경할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금감원에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 (보고자) 그간 논의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안)으로 3억 6,500만 원에서 3억 6,260만 원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는 부분임. 이 부분은 위탁범위를 초과한 주문에 대해서 70%

감경을 적용하는 것이고 전체에서 그 수량이 미미하다 보니까 크게 감경되지 않는 그런 결과임.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선위가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동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위원) 저희가 중요도 계산할 때 부당이득이나 주문금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도 이득이 없어야 되고 주문금액 비중도 낮아야 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로 분류하는 것인지?
- (보고자) 두 가지 다 1% 미만이고 손실이 나는 경우 '하'로 분류되고,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거나 1% 이상이면 '중' 이상으로 그렇게 분류되도록 되어 있음. 그 자체로는 중요도가 '하'임.

(17시 07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금 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으로 과징금 산정제한 것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과징금 산정금액은 2억 8,610만 원으로 7,650만 원이 감경되는 수준으로 나왔음.
- (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2호에서 제94호까지 이상 3건의 안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



하도록 하겠음. 금감원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Pictet Asset Management SA에 대해서는 주식병합 등 기업행위 이벤트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반영시차 등에 따른 오류이므로 위반동기를 '과실'로 수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은 1,410만 원으로 하고, Pie Fund Management Limited에 대해서는 본국에 해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CEO가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등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뉴질랜드에 비해 상당히 커서 본 위반사항 공개시 평판 리스크가 우려되는 점과 미체결금액 부분에 대해서 위탁주문 수량 초과범위에 대해서 70%까지 수정감경하고,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거래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지만 위반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징금을 2억 8,61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의결 제92호, 제94호는 원안의결하고, 의결 제93호는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의결 제92호, 제94호 원안의결, 의결 제93호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95호 『(주)OOOOO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경영참여 목적 없음부터 말씀을 드림. 당사자인 ▼▼▼씨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이사진 3인을 추천했던 것은 오로지 ◆◆◆의 부탁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선임된 이사들은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019년 11월1일에 이루어진 주식양수도 계약인데, 위 계약에 ▼▼▼씨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에, (주)테라테라 회장인 b b b도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음. 그리고 자금조달 결정에 관한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을 모르고 실제로 자금을 조달할 법인으로 명단을 바꾸면 된다고 해서 법인만 제공해 주었을 뿐임. 그리고 공시에도 관여한 바 없었고 나머지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나 담보제공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인정함. 다만,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의 공시 업무에 미숙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것임.

○ (위원) ▼▼▼씨가 이사 3명 선임에 관여한 것은 맞는지?

▶ (진술인) 선임에는 관여를 한 것이 맞음.

○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임된 이사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지?

▶ (진술인) 당사자 ▼▼▼씨의 말에 의하면 ◆◆◆씨가 회사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나마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수를 맞추어 주는 개념으로, 그러한 호의를 제공하는 차원

에서 이사로 등재되도록 했다고 함. 그리고 사실확인서에  
서도 이사로 일했던 J J J씨뿐만 아니라 당시 선임이사  
로 있었던 다른 이사 두 분, J J J씨와 이런 분들이 당  
시에 이분들이 이사로써 일체 근무하지 않았음을 사실확  
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만, 여기 프라이빗에쿼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GP는 아닌 것인지?
- (보고자) 신청하고자 했지만 요건이 안 되어서 등록이 안 되었음.
- (위원) ◆◆◆씨의 진술을 보면 아주 강하게 의견을 내고,  
금감원 자료에 보면 확실히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데  
진술인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신 것인지?
- (보고자) 충분히 감안을 했고, 자조심 이후에 저희가 살펴보  
니까 법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법  
원의 재판이 2021년 7월에 있었던 재판의 진술이었고 저희  
가 ∇∇∇이나 ▲▲▲으로 부터 문답을 받은 것이 그 이후  
였음. 그래서 횡령과 관련해서 ◆◆◆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보니까 ◆◆◆에 유리한 진술을 법정  
에서 했던 것 같고 저희 쪽에 와서는 각자가 다 혐의자이다  
보니까 ◆◆◆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 그래서  
나머지 혐의자들은 ◆◆◆을 중심으로 본 건 무자본 M&A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 (위원) 질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양수도 계약하자마자 자금조달하는 공시할 때 공시한 주체는 결국 前경영진이고 그 분들은 몰랐다, 워낙 완강하게 요구를 하니깐 그랬다고 하는데 다른 진술을 보면 그러한 공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적혀 있기도 함. 물론 그러한 진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자세히 보신 것인지 궁금함. 그러니까 前경영진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일종의 허위공시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가 궁금함.

- (보고자) 前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음.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답과정에서도 그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 혐의자들 자체도 기존 경영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압박을 해서 공시하도록 했다는 취지였음. 그래서 3개 법인이 실제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것을 살펴볼 시간조차 없게 촉박하게 이사회 결의를 요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공시하도록 요청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 (위원) 물론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씨가 연대보증을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융기관 차입금 때문에 자금조달이 필요했다는 식의 진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은지?

- (보고자) 조사담당자 금감원 ♪♪♪ 선임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씨에게 직접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200억 원 채무부담은 기존에 최대주주로 있었을 때 부담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로 즉시 변제요청이 있기는 했는데 즉시 변제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연대보증이 해지되지 않아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최근 되어서야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서 변제되어 연대보증이 해제되었다고 들었음. 그래서 ♣♣♣씨 입장에서는 양수도 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사실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채무가 해지되는 것으로 그 조항에는 나와 있음.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20호 『(주)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